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

“사회적 영향 중대하고 광범위... 예방 필요성 커” 희생자 1인 위자료 2억, 친부모 각 4000만원 등 일실수입 등 더해 유족들 평균 총 6~7억원 받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민사소송을 통해 인정됐다. 사건 발생 4년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안산 단원과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는 희생자들의 일실수입(사고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과 위자료,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로 나누어진다. 일실수입은 희생자들이 60세까지 보통인부 도시일용 노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자료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희생자들 2

억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들에게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동거하는 조부모 1000만원, 동거 안하는 조부모 500만원으로 삼았다. 이외에 특수한 사정을 가진 원고들은 그를 고려해서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단은 총 평균 6억~7억원대 배상을 받게 된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평균 보상금은 약 4억원이었다.

예를 들어 안산 단원과 학생 희생자 김모양 유족의 경우 김양 일실수입·김양 위자료·유족 위자료 등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약 3억 3000만원, 오빠 1000만원으로 총 6억 7000여만원을 받는다.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09명 중 안산 단원과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액 총 규모가 1000억원에 넘었다.

보상은 손해를 메꿔주는 성격에 그치지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 입증 의

미까지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택한 것이다.

전세 등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약 1년5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국가에 대해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준수, 과적, 고박 불량 등 운항과실 및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 미조치로 인해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뉴스



6·25전쟁 전사자 유해 영결식

19일 육군 35사단은 국립일실호국원에서 순창군 생치면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에 대한 영결식을 열었다. (사진=육군 35사단 제공)

전북 경제지표 하락 대응방안 모색

도, 민선 7기 경제상황 점검회의... 생산·소비 위축 수출부문에서는 정밀화학 원료 등 호조 힘입어 증가세

전북도는 이중 무역분쟁 확산, 최저임금 발표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의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와 GM사태 등 고용환경 위축으로 인한 전북 경제 지표 하락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경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민선7기 첫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19일 열

었다. 도내 경제관련 기관, 단체장,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도의 생산, 수출, 수입, 고용의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분석과 이중 무역분쟁, 최저임금발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앞으로의 기

관 간 협업을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고된 전라북도 경제상황 진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내 경기 흐름은 생산과 소비의 위축으로 경제지표가 하락하여 체감경기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수출 부문에서는 정밀화학 원료, 건설광산기계 등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시장 개척과 우수제품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도내 소상공인 경영여료가 예상됨에 따라 경영안정화 긴급자금지원, 민생현장 슬루션팀 운영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도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김진실 기자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약속”

문 대통령, “비효율적 허가 구조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첨단 의료기기가 복잡한 인허가 구조로 신속한 출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비효율적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행사에서 “그동안 의료기기는 개발보다 허가와 기술평가를 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다. 여러분의 도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료기기 산업의 낮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첫 번째 현장 방문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다. 더 쉽고 빠르게 질병을 찾아낼 수 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체외진단 기기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인허가 통합서비스 제공 등 크게 3가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별도의 평가절차를 만들어 혁신성이 인정되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방암 수술 후 상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도 국내에 임상문

“혁신성 인정되면 즉시 출시... 체외진단기 사후평가로 전환 어려운 인허가 과정 쉽게... 식약처 등 통합서비스 제공”

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첫 번째 현장 방문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이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가용해 개발된 의료기기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절실한 환자 자신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며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진입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잘 만들어진 의료기기 하나는 고치기 어려운 환자를 한 명

불렀다. 문 대통령은 또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가용해 개발된 의료기기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절실한 환자 자신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며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진입에 1년 이상 소요되던 것이 80일 이내로 줄어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람 몸에 사용하지 않고 의사 진료 편의를 위한 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만 받으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어렵고 힘든 인허가 과정을 쉽게 만들겠다”며 “현재 의료기기의 허가, 신기술 평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에서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3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